

與 “文 태양광사업 비리 양산”... 野 “尹 친환경 발전 역행”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홍석준 “태양광 비리 엄중 대처 필요”
김태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여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기후위기로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환경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비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대해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각 기업이 써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

너지 사용 비율을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RE100에 가입하면 무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하려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업 전기 수요에) 기

폭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껏 30%로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하고 바뀐 21.5%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NDC 조정안 제출

을 검토하고 있고 2030년 까지 현재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2배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RE100 현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체적 설비 용량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한번 위축되면 목표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력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같이 할 것이고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질문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책임을 따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무조정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것

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과 동북아 그리드의 현실 가능성도 물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현실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중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인데, 이에 대책으로 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국내 기업을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장차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중국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 처리는 뒷전... ‘정쟁’만 벌이는 與野

국민의힘, 전 정부 실정 비판 주력 민주당,尹 유엔 기조연설 비판 맞불

퍼펙트톱(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복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 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복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복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

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꼬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중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이 잠을 청하고 있다. /뉴스시

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조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

해달라”며 정쟁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했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유엔총회 계기 양자외교 돌입... 韓日회담은 불투명

미국의 무역정책 의제 오를 듯 한일 외교장관 만나 의제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국과의 양자외교에 돌입한다.

다만, 대통령실이 기정사실처럼 일찌감치 밝힌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우방

국을 넘어 경제안보 영역까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양국 이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이다.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2일 새벽(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

리는 2년 10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먼저 만나 의제 등을 조율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국 전부터 한미·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나, 기시다 총리는 유엔 총회 출국길에서 “지금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쾌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국내 정치에 민감한 의제들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일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상대와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변동된다고 철회됐거나 입장이 번복됐거나 이런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로서는 빨리 관련 일정들을 정리해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다”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 정상은 온도차가 두드러지며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